

민주 도당 새 수장된 윤준병 의원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당으로 만들 것”

지난 2일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과의 경선으로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새로운 위원장이 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전북특별자치도당의 문턱을 낮추고 도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열린 정당”을 만들겠다며 본격적인 활동 의지를 밝혔다.

윤 위원장은 3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북도당이 명실상부한 민주당의 심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도당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면서 무게감이 크지만 사명감으로 임하겠다”며 “우리 도당은 대한민국 민주당의 심장부로서, 중앙당의 정책과 비전을 지역 현장에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전북 발전의 동력이 바로 민주당 전북도당에 달려 있다”며 “당원들과 함께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내년 지방선거 압승 다짐
“당원 주권 실현 등 핵심”

윤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도당의 개방성과 소통 강화를 꼽았다.

그는 “그동안 도당의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있었다”며 “입당 원서 처리나 행정 절차가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있었던 부분을 개선해 당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살아 있는 도당,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다가올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공정한 공천 관리를 강조했다. 그는 “전북이 민주당의 근간이자 핵심 지역인 만큼, 전북에서 승기를 잡지 못하면 전체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에 따라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공천 기준과 관련해 그는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회장에 선출된 윤준병 의원이 3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포부를 밝히고 있다.

거 기획단에서 조만간 세부 기준을 마련해 최고위원회 인준을 거쳐 하달할 예정”이라며 “절대적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는 배제하되, 상대적 결격 사유는 공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불공정 논란

이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컷오프 없는 예비경선 제도 도입 가능성도 시사했다. “가능한 컷오프를 하지 않고, 예비경선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인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쟁 과정을 통해 당원과 도민이 직접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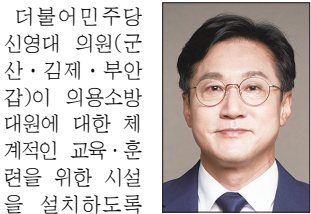
그는 “당원들이 결과를 승복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민주당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정기적인 소통 의지도 밝혔다. “도민뿐 아니라 언론과의 소통도 중요하다”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도당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언론이 제시하는 비판과 조언을 겸허히 듣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끝으로 “전북도당을 도민에게 열린 공간, 당원에게는 참여의 장으로 만들겠다”며 “당원 주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민주당이 민주당답게 서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도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도당, 소통과 신뢰가 살아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 2026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 승리를 이끌겠다”며 기자간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신영대 의원, 의용소방대
연수원 설치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 전문 훈련시설이 없어 현장실습이나 IT 기반 교육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신영대 의원은 소방청장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연수원 등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교육 내용에 ‘임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강화’ 등을 포함하도록 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군산 공약 중 하나인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첫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신영대 의원은 “의용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3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42강이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첨단재생바이오기술 실용화 글로벌 기업 육성”

전북 백년포럼... 김장호 전남대 교수, 지역거점 대학과 긴밀한 협업 등 전략 제시

농생명 거점지인 전북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바이오산업에 첨단재생기술을 접목시키고, 산업 생태계 확장 및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지역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3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전북 백년포럼’ 제42강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기술과 농생명 글로벌기업 육성’을 주제로 전남대학교 김장호 교수가 연사로 초청됐다.

김 교수는 “재생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이지만 실용화는 여전히 더딘 상황”이라며 “핸드폰에 기술이 접목되면서 세상이 바뀐 것처럼 바이오산업에 재생기술 접목을 성공한다면 역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첨단재생바이오를 “사람의 신

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 시키거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인체세포, 유전자, 첨단소재 등을 이용해 실시하는 융복합치료”라고 정의했다.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은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중이며 미국, 일본 등은 이미 적극적인 투자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오는 2030년 글로벌 재생의료시장은 1,279억 달러(약 180조 원)규모에 달하고, 연평균 17.4%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김 교수는 “의약품분야는 의료가기와 코스메틱으로 확장되어 수익창출이 가능하고, 인간 대상의 재생의료는 반려동물과 농업 분야로 확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세포치료제로 분류되는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은 실용화가 매우 어려운 분야지만 조직 재생 기능이 접목된 의료가기, 코스메

틱, 반려동물, 식물 치료 제품 등은 빠른 실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 지역기업 육성 전략으로 △지역거점 대학교와 긴밀한 협업·규제 완화,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등 실질적인 지역기업 투자 환경을 강화,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 강화, △글로벌 기업 육성을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선택과 집중 투자정책을 제시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첨단재생바이오 기술의 확장성과 산업적 잠재력을 지역 산업 발전과 연계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전북이 농생명과 재생의료를 연계한 글로벌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시, 의사결정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조지훈 상임대표
동별 하천 꽃밭 조성 명령 사태 등 언급

더민주전북혁신회의 조지훈 상임대표(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는 3일 논평을 통해 “전주시가 일방·독선 행정을 끝내고 주요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동별 하천 꽃밭 조성 명령’ 사태를 언급하며 “예산과 협의도 없이 시장의 지시로 동장이 꽃을 심고 평가받는 방식은 1980년대식 행정 발상”이라며 “시민을



생태를 훼손한 관리 역시 전주시의 무지와 독선을 드러낸 사례”라고 비

무시한 오만한 행정이 전주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주천의 버드나무를 베어내고 외래 화초를 심는 등 하천

관했다.

그는 “민선 8기 전주시정은 막말과 불통 논란으로 시민의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보여주지식 행정에 머무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소통의 시작은 공개와 개방”이라며 “전주시 주요 회의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신뢰의 시작은 성과와 책임”이라며 “실패를 반성하고 진정성 있게 시민의 상처를 위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일방·독선의 시정을 끝내고 시민과 함께 진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 전주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청년경제인 등, 민노총 ‘새벽배송 금지’ 제안 반발

전북 지역 청년경제인과 스타트업 단체들이 민노총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제이글로벌소셜벤처기업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는 2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는 중요하지만, 새벽배송을 중단하는 방식은 청년창업과 지역

경제를 위협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새벽배송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북을 비롯한 지방에서도 이미 일상적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배송 제한은 농어촌·소상공인 공급망을 흔들고 맞벌이·1인 가구 등 시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근무시간 유연 설계 △적정 인력 운영 △물류 시스템 개선 등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와 사회적 대화기구는 청년경제와 스타트업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